

1. 들어가며
2. 한일 유착 네트워크의 균열
3. 모색과 불신: 5.17 쿠데타와 오히라의 사망
4. 대립과 봉합: 안보 vs 민주화 구도
5. 나오며

1. 들어가며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로의 진입은 냉전의 일시적 휴지기, 즉 데탕트에서 신 냉전기로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관통하는 1980년을 전후로, 한국과 일본 모두 국내적으로도 이행기 속에 있었다. 그 정도는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지도자의 죽음과 잦은 정권 및 내각의 교체를 수반할 만큼 격렬한 것이었다. 한국은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결과 짧은 민정 이양기를 거쳐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등장을, 일본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수상의 사망을 전후로 자민당 내부 파벌투쟁의 절정과 퇴조, 그리고 스즈키 정권의 과도기를 거쳐 전후 총결산을 내건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을 맞이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급박한 권력이동은 곧 대일 또는 대한반도 정책의 불연속을 노정한 것으로 인상지어져 왔고, 따라서 1980년의 한일관계는 암묵적으로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다. 실제로 1980년의 한일관계는 한일관계사 전체를 볼 때 공백이기도 했다. 1979년 말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한일관계의 제1막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한 조정은 1981년 봄부터 이루어졌다. 이른바 한일 간 '안보경협'을 둘러싼 협상과 타협의 과정이 그 것이다²⁾. 하지만 국가 간 상호관계에서 완전한 단절이라는 가정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1980년의 한일관계, 그 중 박정희 사후 한국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있어서 일본의 정치적 역할과 목적, 방식을 정면에서 다룬 연구 성과는 박선원(2000; 2002)이 유일하다.³⁾ 박선원의 주장은 미국이 동북아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의 국제적 위기발생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에 개입하기 어려운 조건에 빠져있고, 미국의 대한정책이 한국의 위기상황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판단될 때, 일본은 일시적으로 한국의 정치적 환경에 독자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주장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전체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카터

1) 본고는 2011년 4월 21일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연구센터 개소기념 학술회의 "외교사 연구의 활성화와 외교 문서의 활용"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한 국민대학교 이원덕 교수의 지적과 제언에 근거해 일부 수정 가필한 것이다. 아직 지적받은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완의 원고인바 인용은 삼가해 주기 바란다.

2) 한일관계사 전반의 시기구분과 한일 안보경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손기섭, '한일 안보경협 외교의 정책 결정: 1981-1983년 일본의 대한국정부차관', 『국제정치논집』, 제49집 1호, 2009을 참고하기 바람.

3) Sun-Won Park, The Dynamics of Triangular Intra-Alliance Politics: Political Interven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wards South Korea in Regime Transition 1979-1980, Doctoral Thesis of University of Warwick, January 2000; 박선원,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1980년 신군부 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국제정치논총』, 제42집 3호, 2002. pp.249-271.

행정부의 대한정책이 한국의 쿠데타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인권개선과 정치적 자유화 추진이라는 도덕외교와 목표와 이반되게 되었고, 이에 더해 이란 인질사태와 소련의 아프칸 침공 등의 정세로 인해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둘째, 오히려 내각은 카터 행정부의 소극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대한정책이 안보를 중시하는 일본의 이해관계와 불일치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총합안보논리에 근거한 독자적인 대한정책의 일환으로 군부세력의 권력장악을 통한 한반도의 안전을 도모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그리고 매우 적극적인 형태로 쿠데타 정권의 등장을 지원해 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결정적인 근거는 '북한 남침설'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보제공이다.

먼저 박선원의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해석은 1980년대 한미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의 한미관계는 광주 민주화항쟁에 대한 미국의 역할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사료의 발굴과 연구 성과의 꾸준한 축적이 있어왔다. 여기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1980년대 이후 카터 행정부의 대한정책에서 도덕외교는 이미 후퇴한 상태라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즉 카터행정부의 대한정책은 안보의 현실적 이해와 민주화의 도덕적 고려 간의 경합이 마침내 전자로 확연히 기울어져, 신군부의 정치참여를 통한 질서와 안정을 중시했고, 이 때문에 광주 민주화항쟁 조기진압에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다⁴⁾. 이렇게 보면, 당초부터 쿠데타 정권에 대한 미일 양국의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선원의 주장대로 안보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했다는 주장을 수용한다고 해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오히려 내각의 총합안보론에 대한 박선원의 이해방식에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총합안보라는 개념 속에는 일본 외교의 적극성이 주장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본라인을 상회하거나, 북한의 위협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논리는 아니었다.⁵⁾ 무엇보다 한국의 쿠데타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총합안보를 제출한 오히려 내각의 붕괴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미국의 대한정책에서는 김대중을 비롯한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구금과 재판에 대한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 그리고 이의 시정을 위해 이루어진 국제적십자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압력 등, 도덕외교의 일면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과거 김대중 납치사건을 경험했던 일본에게 이 문제 또한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박선원의 주장에 근거한다면 일본정부는 미국보다 이 문제에 최소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 과연 그런가? 한편, 신군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때 이른 지지와 일관된 지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 라는 문제가 남는다. 적어도 그 근거가 총합안보론에만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행기 속에 있던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떠한 연속과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일본의 대한정책이 아닌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박선원이 '북한 남침설'과 관련한 정보를 신군부 지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남침설'의

4) 이수인·진원하. 1990. "광주 5월 민중항쟁 전후의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한정책," 한국현대사 자료연구소 편, 『광주 5월 민중항쟁』 서울: 풀빛; 이삼성. 1997.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의 유희통로와 미국의 위치: 1978-80년 미국 대한정책의 치명적 비대칭성," 한국정치학회, 5.18 학술심포지움; 마상윤·박원권. 2010. "테랑트기의 불편한 동맹: 박정희-닉슨-카터정부시기,"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갈등하는 동맹: 한미관계 60년』 서울: 역사비평사; 박원근. 2010. "1979년 12.12 쿠데타와 카터 미 행정부의 대응: 도덕외교의 타협," 『국제정치논총』 제50집, 4호; 박원근, '광주항쟁과 한미동맹',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연구소 개소기념 학술회의 - 외교사 연구 활성화와 외교문서 활용 (2011년 4월 21일,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료관 강당).

5) 総合安全保障グループ 『安全保障戦略-大平総理の政策研究会報告書 5』東京:大蔵省印刷局, 1980. 여기서는 중소양국의 위협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의 불투명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북한 위협의 강조보다는 남북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정보출처는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맥락 속에서 정보제공이 있었나? 일본정부는 실제로 '북한 남침설'을 일관되게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신군부의 정권장악에 일조한 것일까? 이 문제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실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외교사료 및 관련자의 폭넓은 증언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고는 일단 새로 공개된 한국외교통상부 사료를 중심으로 확인 가능한 주요쟁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의 수준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본고는 한일관계의 제2막, 즉 탈냉전을 앞둔 한일관계의 구조변동을 둘러싼 본격적인 접근을 위한 기초적 재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2. 한일 유착 네트워크의 균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의 협조를 전제로 한 안보정책과 산업화전략을 전개해 왔었다. 박정희 정권이 구상한 1980년의 한일관계 또한 이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몇 가지 변화의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1979년 8월에 외무부 아주국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대일 통상확대 전략으로서, 국제적 수평분업을 목표로 한, 중화학 공업제품을 중심의 수출상품 구조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간 대일 무역적자, 한일무역역조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이로 인한 한국경제의 대일 종속이라는 비판적 담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외교관에 있어서는 일본에서 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선린우호'에서 '안보차원의 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전망에는, 북한과도 비 정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한다는, 종래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을 한국 일본도로 전환시키고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져 있었다. 그 일환으로 이러한 대일 안보 경제 전략의 실행을 위한 당면 대책 중 혁신세력과의 관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이색적이었다. 물론, 가장 주요한 과제는 자민당 보수세력의 집권을 유지하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이었고, 특히 '집권유망인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활동'할 것이 거론되어 있었다⁶⁾. 두 달 후에 일본에서는 총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었다. 1979년 10월 7일에 이루어진 제35회 중의원 선거이후, 자민당 제2차 오히라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당시 현안이었던 양국이 추진 중이던 대륙붕 공동개발을 회의가 선거 일주일 후인 동월 12일에 속계 되는 등, 한일관계는 순항하는 듯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10.26 사태)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로부터 열흘 후의 일다.

10.26 사태직후, 오히라 내각은 한국과 신속한 공조를 보였다. 다음날인 1979년 10월 27일 외무성은 중국 및 소련 주재 대사관에 훈령을 내려, 북한의 동향과 관련한 수집하도록 하는 한편, 그 진행상황을 한국 측에 통보해 주도록 했다. 같은 날, 가장 먼저 조전을 발송한 것은 가스카 잇코(春日一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나카소네 야스히로, 야쓰기 가즈오(矢次一夫), 하세가와 다카시(長谷川峻),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등이었다⁷⁾. 이들은 한일 의원연맹과 일한 협력위원회에 각각 또는 중복 소속되어 있었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협력위원회 소속 원들은 자민당 내 주류인 다나카파와 대표적 비주류인 후쿠다파가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안정보장센터(1979년 4월 설립)와 일본안정보장센터와

6) 아주국장, 80년대 한국 외교, 1979. 8. 4, 일본담당관실, 한국의 대일본 외교 정책, 1979-80, 문서번호, 721.1, 릴 번호 2010-08, 파일번호 05, 후레임 번호 1-75.

7) 외무부 아주국, 일본담당관실, 일본의 반응과 조치 (박대통령 각하 서거와 관련), 1979. 10.30, 일본담당관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979-80, 분류번호 721.3, 릴 번호 2010-08, 파일번호 14, 후레임 번호 1-167.

일본전략센터에(1980년 7월)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양 연구센터에는 이후 안보경협을 주역으로 등장하게 될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도쿄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관여하고 있었다⁸⁾. 한일관계를 막후에서 주도하던 이들에게 박정희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야당 및 비판적 여론은 이 그룹들에 의해 이루어진 한일 간의 공식 비공식, 수혜-후원관계를 한일 간의 '유착(癒着)'으로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10.26 사태 이후, 이 유착에 의존해온 양국관계의 체질 개선과 대 한국 및 대한반도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당시 오히라 내각은 의연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에서 10.26사태가 있는 후, 최규하 대통령으로 권력이 이양 및 신군부의 반란(12.12사태) 등의 격변이 일어나는 동안,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소위 '40일 항쟁'을 시작으로 파벌투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특히 오히라에 대한 수상지명이 있는 직후인, 1980년 3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한 경제협력자금의 일부가 역류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현금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당 오이데 슌(大出俊)의원에 의해 폭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⁹⁾. 한일 간의 이러한 유착의 병폐에 대해, 당시 언론에서는 한국의 정치정세에 여하에 따라 이러한 정치스캔들이 연이어 폭로될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했다¹⁰⁾.

오히라는 당내에서 다나카 파였고, 그 수장이 록히드 사건으로 피고인 위치에 있었다. 즉, 한국의 정치적 급변, 즉 전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이루어질 경우, 한일 간 유착 또는 네트워크는 균열 될 것이고, 이는 오히라 내각의 위기를 가중시킴은 물론 업계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었다. 따라서 12.12사태 직후, 오히라 내각은 주일대사를 통해, 야나기야 겐스케(柳各謙介) 외무성 아주국장의 한국과견도 동시에 타진했었다¹¹⁾. 우선 한국의 사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 또한 일본 외교라인과의 직접접촉에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동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만큼,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일본의 공식 외교망을 활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야나기야 아주국장의 한국 방문 타진은 중국방문에 동행한 직후((1979.12.5-6) 였다¹²⁾. 한편 당시 오히라 내각이 추진하고 있던 환태평양 지역 공동체 추진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받았다는 정황도 있었지만¹³⁾, 무엇보다 환태평양 공동체 추진과정에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관련한 보고를 받기 전부터 중국의 참여문제에 찬성의 입장을 굳힌 상태였다. 그리고 그 외 그 간 정세변동에 의해 미루어져 왔던 한일간 현안들을 총 망라해 이를 조기에 정상 추진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었다¹⁴⁾. 이에 대해 일본은 여

8) 五島隆夫『コリアンウォッチャ』東京：現代の理論社，1982，pp.22-25.

9) 『朝日新聞』1980년 3월 8일

10) 『エコノミスト』毎日新聞社、1979.11.13, p.3.

11) 주일대사로부터 외무장관으로의 전문, 한일정책 협의회 및 무역회담, 1979.12.24, 일본담당관실, 야나기야(柳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 1.8-13, 분류번호 724.62, 릴 번호 2010-31, 파일 번호 07, 후레임 번호 1-269.

12) 외무장관으로부터 주일대사로의 전문, 한일 아주국장회의, 1979.12, 일본담당관실, 야나기야(柳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 1.8-13, 분류번호 724.62, 릴 번호 2010-31, 파일 번호 07, 후레임 번호 1-269.

13) 아주국장회의 면담요록, 1980.1.9, 일본담당관실, 야나기야(柳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 1.8-13, 분류번호 724.62, 릴 번호 2010-31, 파일 번호 07, 후레임 번호 1-269.

14) 당시 한국정부가 한일 아주국장 회담에 대비해 정리한 현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료회의, 2. 외상회담, 3. 정책협의회, 4. 홋카이도 주변 조업문제, 5. 독도문제(안전조업문제), 6. 대북봉 공동개발, 7. 대북과 전략물자 수출문제(북일관계), 8. 재일교포 보안사범문제(일본 내 반한단체), 9. 김대중 문제, 10. 총영사관 승격문제,

론과 직결된 독도주변 조업문제와 김대중 신변처리 문제를 우선적인 의제로 제안했다¹⁵⁾. 김대중 신변처리 문제는, 1973년 11월 김종필-다나카 수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양해사항, 즉, 김대중이 일본 체제 중의 "언동 및 행동과 관련해, 언동을 재범치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양국 간 약속이행의 여부가 관건이었다.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야당 및 여론의 반발에 대한 고려만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현재의 체제, 그 중 12.12 사태 이후 신 군부가 이 양해사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구축된 양국 간 정치적 네트워크의 존속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일 아주국장 회담은 1979년 12월 9일과 10일 양일 동안 이루어졌다. 야나기 국장은 한국 측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방한 직전에 있었던 오히라 수상의 방중 당시, 중국 측의 발언을 통해 10.26 사태 이후에도 북한의 남침의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¹⁶⁾. 이와 관련해 한국의 김태지 외무부 국장은 일본의 대북정책을 거론하며, "현 시점에서 북일 간의 교류는 어느 차원이든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새로운 관계수립이나 교류 증진사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대일 채무문제와 관련한 북일 간의 교섭과 양국 간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¹⁷⁾, 그리고, 조총련을 경유한 일본의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문제 등¹⁸⁾이 심각한 안보문제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12.12 사태와 김대중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우려를 전한 야나기 국장에 대해, 김태지 국장은 "군부의 주요 지휘관들은 최대통령의 정책방향에 충실하며, 한미관계에도 이상이 없다"는 점과, "김대중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개입한 바 없고, 따라서 주권침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담 당시, 김태지 국장의 발언 들 속에서 확인되는 한국 정부의 논리는 대내적으로 제4공화국 준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북한의 무력남침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상기시키면서, "한반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본의 안보에도 직결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의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킬 요인들을 제거시키는 데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양국 간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경제 불안이 정치적 불안을 유도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이전보다 전향적으로 한일 간 무역역조 상황에 대한 시정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었다¹⁹⁾. 즉, 한국의 정치적 불안을 역으로

11. 안보문제, 12. 문화교류 방안. 13. 항공, 14. 북송교포문제, 북송교포인권문제, 15. 조총련 문제, 16. 재일 교포법적지위, 17. 사하린 교포송환, 18. 원폭 피해자, 19. 유골송환, 20. 구 해저 전선문제, 21. 북관대첩비 반환문제 (일본담당관실, 한일 아주국장 회의, 1979.12. 일본담당관실, 야나기야(柳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 1.8-13, 분류번호 724.62, 릴 번호 2010-31, 파일 번호 07, 후레임 번호 1-269).

15) 대통령에 대한 외무부 보고사항, 한일 아주국장회의, 1980.1.10, 일본담당관실, 야나기야(柳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 1.8-13, 분류번호 724.62, 릴 번호 2010-31, 파일 번호 07, 후레임 번호 1-269

16) 아주국장회의 면담요록, 1980.1.9; 첨부2> 일중공 수뇌급 회의시 한반도 문제 언급요지, 중국담당관실, 중공의 최근 동향과 정세, 1980.1.4, 일본담당관실, 야나기야(柳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 1.8-13, 분류번호 724.62, 릴 번호 2010-31, 파일 번호 07, 후레임 번호 1-269.

17) 북일 간 무역관계는 74년에 피크를 이루었으나, 이후 북괴의 과도한 대일 수입분에 대한 대금지불 무제와 관련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77년부터 다시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었다. 북한은 1979년 당시까지, 850억 엔에 달하는 무역대금 채무를 진 상태였고, 이 때문에 동년 7월에 북한의 조선 무역은행 대표단(단장: 방기영)이 방일해 지불연기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북일무역과 관련한 사항은, 일본담당관실, 북한, 일본 경제관계, 1980, 분류번호, 725.6, 릴 번호, 2010-34, 파일 번호 13, 후레임 번호 1-133.

18) 오사카 소재 조선공화교역(북한 대남사업 총책 김중린의 사돈이 운영)에서 군사 장비 등을 비밀리 수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일본담당관실, 한일 아주국장 회의, 1979.12, 일본담당관실, 야나기야(柳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 1.8-13, 분류번호 724.62, 릴 번호 2010-31, 파일 번호 07, 후레임 번호 1-269.

19) 아주국장회의 면담요록, 1980.1.9, 일본담당관실, 야나기야(柳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 1.8-13, 분류번호 724.62, 릴 번호 2010-31, 파일 번호 07, 후레임 번호 1-269.

일본의 대일접근에 대한 견제 및 한일 무역불균형 해소 및 경제원조의 유치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일 아주국장 회담의 성과는 안보분야에서 나타났다. 1980년 2월 9일에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청 참사관은 자위대와 한국군의 합동연습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고²⁰⁾, 3월 5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오키타 사부로(大來佐武郎)외상이 직접, "집단적 자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과 합동 군사연습을 하여도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을 분명히 했다²¹⁾. 이후, 4월에는 한국 국방대학원생과 일본 방위연수생 간의 교환방문이, 5월에는 한일 안보협의회가 연이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북한으로 부터의 비난논평이 발표되기도 했다²²⁾. 한반도의 정세불안 속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시도라는 패턴의 전형이었다. 안보교류로 조성된 한일 간의 협조분위기는 한국의 박동진 외무장관의 공식적인 일본 방문이 이루어졌다. 당시 오히라 내각의 최대 현안은 6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대한 대책이었다. 따라서,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 어민들을 자극하던 훗카이도 근해 한국어선 조업억제와 독도 근해 일본어선의 조업 문제였다²³⁾. 이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양보가 있었다. 독도 근해의 경우, 한국은 지난 아주국장회의 당시 조업자체는 묵인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었다²⁴⁾. 한편, 한국 정부가 요구한 일본의 대북한 물자수출 억제와 관련해서는 통산성으로 부터 관련 자료제공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박동진 외무장관은 본국에 북한과 관련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²⁵⁾. 북한과 무역, 경제, 문화 등의 분야의 교류를 점차 쌓아간다는 일본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오히라 수상이 이미 지난 1월 정부 시정연설에서 확인한 바 있었다²⁶⁾. 보다 주목할 것은 3월 10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오키타 외상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일보 진전시키는 일이 열릴 지 모른다"고 발언한 점이다²⁷⁾. 일본이, 12.12사태이후 북한이 전개하던 '대남 평화공세'²⁸⁾에 경사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북한 '남침 위협설'에 대해서 사실상 완전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즉, 양자 간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해 두고 한국과의 안보협력과 북한과의 비정치 교류의 지속을 공존시키는, 일종의 양레도 접근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20) 주일대사로부터 외무장관으로의 보고, 한국관계 기사, 1980. 2, 일본담당관실, 한 일본간 군사협력, 1979-80, 분류번호 729.81, 릴 번호 2010-38, 파일 번호 12, 후레임 번호 1-68.

21) 주일대사로부터 외무장관으로의 보고, 한국과의 군사연습 (언론보도), 1980. 3, 일본담당관실, 한 일본간 군사협력, 1979-80, 분류번호 729.81, 릴 번호 2010-38, 파일 번호 12, 후레임 번호 1-68.

22) 한일 방위연수생 교환방문, 1980. 5. 6.; 복귀, 한일 안보협력 비난, 1980. 5. 6, 일본담당관실, 한 일본간 군사협력, 1979-80, 분류번호 729.81, 릴 번호 2010-38, 파일 번호 12, 후레임 번호 1-68.

23) 일본담당관실, 장관님 아주 순방결과(책자) 평가자료 (일본방문), 1980.5.26, 일본담당관실, 박동진 외무장관 일본방문, 1980.4.16-18, 전3권(V.2 결과보고), 분류번호 724.31, 릴 번호 2010-27, 파일 번호 04, 후레임 번호 1-168.

24) 일본담당관실, 한일 아주국장 회의, 1979.12, 일본담당관실, 아니기야(柳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 1.8-13, 분류번호 724.62, 릴 번호 2010-31, 파일 번호 07, 후레임 번호 1-269.

25)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로 전문, 1980.4, 일본담당관실, 박동진 외무장관 일본방문, 1980.4.16-18, 전3권(V.2 결과보고), 분류번호 724.31, 릴 번호 2010-27, 파일 번호 04, 후레임 번호 1-168.

26) 第91回日通商国会에서의 政府演說(1980. 1.25), 1980년1월26일, 일본담당관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979-80, 분류번호 721.3, 릴 번호 2010-08, 파일번호 14, 후레임 번호 1-167.

27) 日政府、北韓關係發言要旨 (駐日大使言論報道報告), 1980년3월, 일본담당관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979-80, 분류번호 721.3, 릴 번호 2010-08, 파일번호 14, 후레임 번호 1-167.

28) 이와 관련해서는 정보문화국, 북괴의 아국정세 이용책동 분석, 1980.6, 일본담당관실, 기우찌(木内昭胤)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6.9-13, 분류번호 724.62, 릴 번호 2010-31, 파일 번호 06, 후레임 번호 1-105.

3. 모색과 불신: 5.17 쿠데타와 오히라의 사망

한일 외상회담에서는 박동진 외무장관은 참의원 선거 직후에 제11차 한일 각료회의를 재개시키고, 일본의 대한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7월부터 관민 협동으로 '대한 수입 등 촉진 사절단'의 파견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회담 직후 주일 대사관으로부터 "자민당 내부항쟁의 격화로 정치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일 외상회담에서 합의된 현안처리가 불투명해 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이루어 졌다²⁹⁾. 실제로 1980년 5월 16일 오히라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고, 이에 대한 당내 후쿠다파 등 자민당 비주류가 동조하는 사태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일 대사관에서의 예상보고와는 달리, 보다 극적인 정치변동이 바로 다음날 한국에서 발생했다. 5월 17일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발표(5.17 쿠데타)한 것이다. 특히 다음날 발생한 광주 민주화 항쟁의 배후로서 김대중이 '내란음모의 배후'로서 지목되면서, 일본에서는 여론은 한국의 신군부 세력에 대한 비난과 한국정부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오히라 내각에 대한 비판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한일관계를 긴급히 재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신임 기우치 아카타네(木内昭胤) 아세아 국장을 한국에 파견해, 6월 11일부터 김태지 국장과 한일 아주국장 회의에 임하도록 했다. 회의에서 기우치 국장은 먼저 7월경 오키타 외상의 방한일정을 유보하지만, 같은 시기 예정된 구매사절단의 방한은 종래대로 추진한다는 외무성의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일본 경제계의 입장을 고려한 당연한 조치였다³⁰⁾. 당시 기우치 국장이 "한일 간 무역 불균형 문제는 10.26 사건발생 이전의 상태로 소급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일 정도로, 박정희 정권 시대에 구축된 한일 간 경제 네트워크의 균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피크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대한 엔 차관 공여에 관한 실무자 회의 또한 당시의 정국과 상관없이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한일 아주국장회담에서 실질적인 논점은 결국 김대중 문제로 모아졌다. 김태지 국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더불어, 중단되지 않고 있던 일본정부의 대북접근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외무성이 전달한 북한의 남침 가능성 부정하는 중국 발 정보를 상기시키면서, "100%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자세였다. 이에 대해 기우치 국장은 일본정부의 일각에서 "김(대중)씨가 사형을 언도받는 상황이 되면, (한일)각료회의 개최도 유감스럽지만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는 말로 응수했다³¹⁾. 사실상 일본정부의 김대중 문제에 대한 개입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아주국장 회담에서 기우치가 이전보다 김대중 문제를 강하게 부각시킨 이유는, 오히라 내각의 불신임안이 가결된 후, 1980년 5월 19일 중의원 해산과 중의원 실시라는 정치 일정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문제가 재차 수면위로 오른 광주 민주화 항쟁 발생 바로 다음날이었다. 특히 이번 중의원 선거는 6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되었다. 일본 정치사상 최초의 '더블선거'였다. 집권 자민당으로서는 사할적인 선거였고, 따라서 야당과 여론의 공격재료였던 김대중

29) 주일대사로부터 외무장관으로의 전문, 일본정국 현황과 전망, 1980. 5, 동북아1과, 일본 정치경제, 1980. 제 3권 (V.2 중참의원 동시선거), 분류번호 772, 릴 번호 2010-76, 파일번호 06, 후레임 번호 1-278.

30) 아주국장 회의 당시에 이미 이미 35개사 70여명의 사절단 구성이 이루어진 상태였다(한일 아주국장회의, 1980. 6, 일본담당관실, 기우찌(木内昭胤)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6.9-13, 분류번호 724.62, 릴 번호 2010-31, 파일 번호 06, 후레임 번호 1-105).

31) 한일 아주국장회의, 1980. 6, 일본담당관실, 기우찌(木内昭胤)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6.9-13, 분류번호 724.62, 릴 번호 2010-31, 파일 번호 06, 후레임 번호 1-105.

문제는 최우선 선결과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일 아주국장회의가 끝난 6월 12일 일본에서 추가적인 정세변동이 일어났다. 오히라 수상이 사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 또한 시급한 재정비가 요구되었다. 파벌투쟁의 폐해 속에 치러지는 총선거 이었던 만큼, 외무부는 자민당의 과반수 획득 실패 및 연립정권의 등장이라는 시나리오도 상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야당의 발언력 강화로 일본의 대 북한 접근의 저지력이 약화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히라 장례식에 각계 최고위 조문 사절단을 구성하는 한편, 자민당 친한 후보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한 대책들이 제시되었다³²⁾.

1980년 6월 24일, 일본의 총 선거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이로서 오히라는 자민당 파벌의 폐해를 드러낸 당사자이자, 죽음으로 승리를 이끈 장본이 된 것이다. 특히 한일 의원연맹 및 일한 친선협회 관계자 등 친한 인사들 중, 중위원에 입후보한 176명 중에 164명이 당선되었고, 참위원에서는 38명의 입후보자 중에서 34명이 당선되었다³³⁾.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한일관계 전망은 매우 낙관적인 것이 되었다. 한국 외무부는 일본 총선거 이후, 각료회의 및 외상 방한 등 주요 한일 양국외교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은 물론, 일본의 대북접근이 경감과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한접근의 적극화의 가능성을 점쳤다. 그리고 향후 3,4년간 양국 간의 우호협력이 유지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보이고 있었다. 일본의 차기 정권의 담당자에 대한 예측 또한 마찬가지로였다. 한국 외무부가 가장 주목한 인물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였다. 한일 각료회의에 과거 1968년과 1972년 두 차례나 일본 측 대표로서 참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1979년 4월에는 군사 경제정세 조사차 방한하는 등, 한국통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외무부는 나카소네를 10.26사태 이후, 한국문제에 가장 우호적인 반응과 발언을 한 일본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있었다³⁴⁾. 그 다음으로 외무부에서 지목된 것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였다. 기본적으로 대한관계에 이해가 깊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미야자와는 무엇보다 1975년 김대중 사건에 대해 한일 양국 간 양해를 결착시킨 장본인이었다. 김대중 문제와 관련해, 당시 한국정부는, 7월 3일 신군부에 비판적인 일본 언론기관의 한국지부를 폐쇄시키는 등, 강경한 자세로 전환한 상태였다. 총선거 국면이 끝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총선거를 전후로 김대중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후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한국에서 일본 언론기관이 폐쇄된 다음날인 1980년 7월 7일, 오키타 외상은 오히라 수상 장의 출석차 방일한 박충훈 총리와 박동진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문제에 관해 일본정부는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했고³⁵⁾, 그 후에도, 김대중의 군법회의 송치가 이루어지던 시점에서는 오키타 외상은 물론 기우치 국장 또한 한국 측에 김대중 사건에 관한 양국간의 양해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했다³⁶⁾. 이에 대해 한국은 동월 13일 김대중 문제와 관련한 과거 한일간 양해사항에서 "불문에 부친다"는 부분에 대해, 당시의 "결착 이후에도 그 이전에 있었던 것과

32) 아주국, 오히라 사후 일본 정국 동향, 1980. 6.19, 동북아1과, 일본 정치정세, 1980. 제3권 (V.2 중참의원 동시선거), 분류번호 772, 릴 번호 2010-76, 파일번호 06, 후레임 번호 1-278.

33) 주일대사로부터 외무장관으로의 진문, 일본선거결과(제8신), 1980. 6.24, 동북아1과, 일본 정치정세, 1980. 제3권 (V.2 중참의원 동시선거), 분류번호 772, 릴 번호 2010-76, 파일번호 06, 후레임 번호 1-278.

34) 외무부, 제36차 중원선거 및 제12차 참원선거 결과 보고, 1980. 6.24, 동북아1과, 일본 정치정세, 1980. 제3권 (V.2 중참의원 동시선거), 분류번호 772, 릴 번호 2010-76, 파일번호 06, 후레임 번호 1-278.

35) 주일대사로부터 외무장관으로의 진문, 일본의 대한정책 (언론보도), 1980. 7. 6, 일본담당관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979-80, 분류번호 721.3, 릴 번호 2010-08, 파일번호 14, 후레임 번호 1-167.

36) 大來日本外相韓國關係發言要旨(7.12日本各朝刊報道), 1980年7月12日, 일본담당관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979-80, 분류번호 721.3, 릴 번호 2010-08, 파일번호 14, 후레임 번호 1-167.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불문에 부쳐질 수 없다"는 새로운 견해를 주일 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전달했다³⁷⁾. 김대중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공방은 일본에 새 내각이 출범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한국으로서는 스즈키 젠코 (鈴木善幸)의 수상 취임자체가 의외의 결과였고, 신임 이토(伊東正義)외상의 취임도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민당 내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일조의런 소속이었고, 김대중 문제에 대한 한일간 양해가 있었던 75년에 북한을 방문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³⁸⁾. 스즈키 수상은 취임당시, 한일관계에 대해 우호협력관계 유지를 말하면서도, "한국의 추이를 신중히 주시해 나가면서" 라는 전제를 달고 있었고, 한일 정기각료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³⁹⁾. 유일하게 예정대로 추진된 현안과 관련한 한일간 일정은 7월 19일에 있는 '대한수입 및 경제교류 촉진단'의 방한이었다.⁴⁰⁾ 한일 간의 이러한 교착상태에 대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시도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1심 재판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8월 4일 기우치 아주국장은 "한일 양국 관계를 안보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재판과정에서 "이 건설적인 인식을 기초로, 김대중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양해는 어떠한 형태로는 지켜지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⁴¹⁾. 한국정부가 중시하고 있던 안보문제, 즉 일본정부의 북한에 대한 접근을 자중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비공식 견해'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분명 타협의 여지를 고려한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4. 대립과 봉합: 안보 vs 민주화 구도

하지만 당시 한국의 정국은 기우치 국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선출되는 등, 신군부 정권의 등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전두환 정권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경제였고, 따라서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외교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김동휘 차관은 정권 출범과 더불어 일본 대장성측에 접촉해, 새 정권이 "경제 테크노크라티 중심이 되어 입각"되었다는 점을 어필하고, 지속적인 경제지원 요청했다⁴²⁾. 하지만 김대중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쿠데타에 의한 정권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정권의 안정이었고, 이 점에서 김대중 재판에서의 후퇴는 정당성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스즈키 내각의 입장은 한국의 그 것과 정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규하 대통령 하야 당시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중시의 입장을 견지하는 대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천명했지만, "김대중의 생명"에 관해서는 주시하고 있음을 되풀이해서 전하고 있었다⁴³⁾. 친한파로 분류되는 일한의원연맹 대행 가스가 잇코 조

37) 주일대사로부터 외무장관으로의 전문, 기우찌 아시아국장과의 면담, 1980. 7.13, 일본담당관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979-80, 분류번호 721.3, 릴 번호 2010-08, 파일번호 14, 후레임 번호 1-167.

38) 아주국, 스즈키 정권의 성격과 대한 정책 전망, 1980. 7.18, 동북아1과, 일본 정치정세, 1980, 전3권 (V.3 스즈키 내각 출범), 분류번호 772, 릴 번호 2010-76, 파일 번호 07, 후레임 번호, 1-153.

39) 스즈키 수상 취임 기자회견서의 외교부문 요지, 1980. 7.18, 동북아1과, 일본 정치정세, 1980, 전3권 (V.3 스즈키 내각 출범), 분류번호 772, 릴 번호 2010-76, 파일 번호 07, 후레임 번호, 1-153.

40) 여기서도 단장인 우에다 미즈오(植田三男)는 "한국기업의 구조개혁의 선행"을 강조하는 등, 한일 무역역조와 관련한 일본 측의 인식의 후퇴를 보여주었다 (면담요록, 1980. 7.19, 일본담당관실, 한, 일본 경제 통상협력, 1980, 분류번호 761.2, 릴 번호 2010-60, 파일 번호 11, 후레임 번호 1-15).

41) 한일 주요현안에 대한 일측 견해(8.4. 일 외무성 본내 아시아국장 비공식 의견), 1980. 8. 6, 일본담당관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979-80, 분류번호 721.3, 릴 번호 2010-08, 파일번호 14, 후레임 번호 1-167.

42) 면담요록, 1980. 9. 3, 일본담당관실, 한, 일본 경제 통상협력, 1980, 분류번호 761.2, 릴 번호 2010-60, 파일 번호 11, 후레임 번호 1-15.

차 "한국정부가 쇠신을 서두르는 나머지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망치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방한에 나서기도 했다⁴⁴⁾. 여론과 각종 미디어에서는 전두환 정권의 등장에 대한 높은 수위의 비판이 동반되었다. 예컨대, 8월 16일자 요미우리 신문 사설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강권정치로 참된 안정이 가능할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고, 같은날 마이니찌 신문의 사설의 경우,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억압정치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불가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역코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⁴⁵⁾. 이러한 분위기는 김대중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되면서 격화되었고, 이 때문에 한일 간에는 외교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1980년 9월 17일, 김대중 재판의 1심 판결이 있는 직후, 아사히, 마이니찌, 요미우리 등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비난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는 자유진영의 저항감과 불신을 야기할 것이며, 긴 안목에서 미일 양국과의 연대를 깨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논조였다⁴⁶⁾. 스즈키 내각 또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임시국회 대책 마련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당시 초안된 일본 정부의 입장의 개요는 "한국의 안정이 일본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는 인식" 하에, "한국의 민주화를 통한 국내안정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재판 결과에 대한 제고를 간접적으로 촉구한다는 것이었다⁴⁷⁾. 뒤이어, 후쿠다 전 수상의 방한 요청이 주일대사를 통해 한국 외무부로 전달되었다. 후쿠다의 방한계획은 당초, 김대중 재판이 있기 전에, 야즈기 가즈오(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 국책연구소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⁴⁸⁾. 박정희 정권 시대 한일관계의 막후 실력자와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이 나선 것이다. 후쿠다의 방한 추진 중, 자민당 및 스즈키 내각으로부터 재판이후의 전 개여하에 따라 "한국에 대한 기술원조, 경제협력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분출되고 있었다. 주요 언론에서도 비스한 논조가 등장하고 있었다. 예컨대 아사히 신문의 경우, "한국의 민주화가 국내 문제라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국내건설에는 국제 신용이 중요하다"라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다⁴⁹⁾. 일본 측의 주장이 한일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었고, 후쿠다 또한 방한 중에 이러한 일본 내의 분위기를 한국 측에 전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방한 첫 행사인 1980년 9월 24일의 오찬행사에서, 노신영 외무장관은 매우 직설적인 인사말로 후쿠다 일행을 맞이했다. "일본정부가 아무리 많은 자유를 누린다 하여도 (중략) 언론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절도와 균형이 있다"라면서, 한국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43) 일, 스즈키 수상 한국관련 발언(1980. 8.18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 시), 1980. 8.19, 일본담당관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979-80, 분류번호 721.3, 릴 번호 2010-08, 파일번호 14, 후레임 번호 1-167.

44) 주일대사로부터 외무장관으로의 전문, 가스가 의련회장 대행 방한(언론보도), 1980. 8.19, 일본담당관실, 일본 국회의원 방한, 1980, 분류번호 724.52, 릴 번호 2010-30, 파일 번호 05, 후레임 번호 1-79.

45) 최규하 대통령 사임에 대한 일본의 반응, 1980. 8.17, 일본담당관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979-80, 분류번호 721.3, 릴 번호 2010-08, 파일번호 14, 후레임 번호 1-167.

46)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 면담 자료, 1980. 9.18, 일본담당관실, 한일본 정무일반, 1980, 분류번호 722.1, 릴 번호 2010-09, 파일 번호 10, 후레임 번호 1-107.

47) 주일대사로부터 외무장관으로의 전문, 김대중 문제(언론보도), 1980. 9, 일본담당관실, 후쿠다(福田武夫) 전 일본 수상 방한, 1980.9.24-26, 분류번호 724.22, 릴 번호 2010-26, 파일 번호 09, 후레임 번호 1-348.

48) 주일대사로부터 외무장관으로의 전문, 1980.9, 일본담당관실, 후쿠다(福田武夫) 전 일본 수상 방한, 1980.9.24-26, 분류번호 724.22, 릴 번호 2010-26, 파일 번호 09, 후레임 번호 1-348.

49) 주일대사로부터 외무장관으로의 전문, 후쿠다 전수상 방한(언론보도), 1980.9, 일본담당관실, 후쿠다(福田武夫) 전 일본 수상 방한, 1980.9.24-26, 분류번호 724.22, 릴 번호 2010-26, 파일 번호 09, 후레임 번호 1-348.

보도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⁵⁰). 당시 한국 정부는 후쿠다의 방한을 일단 대일 여론의 재조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어필하는 한편, 지난 7월에 폐쇄시켰던 일본 언론사의 서울지국 폐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복안이었다.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후쿠다 방한 일정에도 일본의 주요언론사를 거의 빠짐 없이 초청한 상태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쟁점이었던 김대중 신변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보 양보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한일 간 양해사항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김대중 재판시 반공법 제4조 즉 반국가 단체 찬양 및 고무의 죄목은 기소사실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물론 김대중의 사형을 포함한 재판결과는 어디까지나 국내문제임을 분명히 한다는 전제하에서였다. 이와 병행해, 한반도의 안정이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논리 하에, 현안문제로서 한일 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일본 측의 성의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한편, 후쿠다 방한 직전에 있었던 자민당 아시아 아프리카 문제연구소 소속의원들의 방북활동(1980.9.9-16)을 맹비난했다. 일본의 북한의 정치적, 공식적 접촉은 한국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일본은 북한의 동맹국들이 한국에 접근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일본이 먼저 북한과 성급하게 관계증진을 시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¹).

한국 외무부는 전두환 대통령에 후쿠다 방한의 성과로서 일본 국내에서 김대중 문제에 대한 자중론이 확대되었다고 자평하고, 일본 정부도 이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에 있어 종래보다 신중한 태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⁵²). 실제로, 후쿠다는 귀국 후에 있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 문제가 외교교섭으로 해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일본 정부 및 여론의 냉정하고 조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⁵³).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 되어 왔던 한일 경협과의 연계 주장도 오히려 김대중의 신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한일관계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⁵⁴). 결국 후쿠다의 방한에서는 그 간 한일 간에 조성되었던 민주화 vs 안보 논쟁구도, 즉, 한국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 한일 경협논리와 이에 근거한 김대중 문제의 선결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과, 한국의 안정과 일본의 안보를 위한 한일 경협논리와 이를 위한 일본의 대북접근 시정이라는 한국 측의 요구 중, 후자가 일단 관철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로서 한일 간의 대립이 완전히 봉인된 것은 아니었다. 이듬해 인 1981년 봄부터 전두환 정권이 일본과의 '안보경협' 추진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다시 공방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대일정책의 각론 작성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서 1980년 12월의 시점에 작성된 '중장기 대일정책'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서두에 밝힌 박정희 정권 당시 작성

50) 후쿠다 전 총리대신각하를 위한 외무장관 환영 오찬사, 1980.9.24, 일본담당관실, 후쿠다(福田武夫) 전 일본 수상 방한, 1980.9.24-26, 분류번호 724.22, 릴 번호 2010-26, 파일 번호 09, 후레임 번호 1-348.

51) 외무부, 후쿠다 다게오 일본국 전총리대신 방한 면담자료 (1980.9.24-9.26), 1980. 9, 일본담당관실, 후쿠다(福田武夫) 전 일본 수상 방한, 1980.9.24-26, 분류번호 724.22, 릴 번호 2010-26, 파일 번호 09, 후레임 번호 1-348.

52) 외무부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보고사항, 후쿠다 전 일본국 총리대신 방한에 대한 평가 및 반응, 1980. 9, 일본담당관실, 후쿠다(福田武夫) 전 일본 수상 방한, 1980.9.24-26, 분류번호 724.22, 릴 번호 2010-26, 파일 번호 09, 후레임 번호 1-348.

53) 후쿠다 전총리 일본 기자단과의 회견, 1980. 9.25; NHK 후쿠다 전 수상 방한소감 인터뷰, 1980. 9.27, 일본담당관실, 후쿠다(福田武夫) 전 일본 수상 방한, 1980.9.24-26, 분류번호 724.22, 릴 번호 2010-26, 파일 번호 09, 후레임 번호 1-348.

54) 주일대사로부터 외무장관으로의 전문, 후쿠다 전수상 방한(언론보도), 1980.10, 일본담당관실, 후쿠다(福田武夫) 전 일본 수상 방한, 1980.9.24-26, 분류번호 724.22, 릴 번호 2010-26, 파일 번호 09, 후레임 번호 1-348.

된 대일정책의 구상이 그 총론은 유지된 채 보다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한일 무역역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일 수출상품 구조 개선노력으로서 기계류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에 역점을 두고, 수평적 국제분업을 위한 대책으로서 상호경쟁지향 및 비교우위의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이,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통해 원자재 및 자본재의 대일 수입 편중을 지향한다는 전략이 세워졌다. 한편, 한일 간 선린우호관계에서 안보차원의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축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를 병행시키고, 그 범위 안에서 일본이 북한의 도발억제에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⁵⁵⁾.

5. 나오며

1980년을 전후로 한 한국의 쿠데타 및 신군부의 등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안보를 중시하고 있었지만, 그 것이 미국의 그 것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거나 일관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일본에게 있어 신군부는 박정희 사후 한일 유착 네트워크를 대체할 정치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 내정의 조기안정과 가능한 과거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일본의 접근은 신중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사후에 일본이 북한의 남침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조기에 진단할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다만 그 출처는 중국이었고,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은 관련한 정보를 직접적인 확인을 통해 갱신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남침 가능성은 일본 스스로 부정되기도 했다. 이것을 유력한 '설'로서 적극 활용한 것은 오히려 전두환 신군부였다고 할 수 있다. 쿠데타 정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신중한 접근은 일본내부의 급격한 정치변동에도 연유한 바가 크다. 특히 일본은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박정희 정권과의 정치적 타결의 준수와 국내적 여론을 강하게 의식해 매우 적극적인 개입의 의사를 보였다. 이는 양국 간에 외형상 안보 vs 민주화라는 일시적인 관계구도를 양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군부의 권력 장악이 확고히 되어감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질서유지와 안보를 중요시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김대중 재판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게 된다. 이는 일본의 쿠데타 정권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안보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이라기 보다 수동적 수용이라는 측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1980년을 전후로 한 한일 양국의 상호작용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이행기적 혼란 속에서도 종래의 대일정책 또는 대한반도 정책의 기초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박정희 정권 말기에 기초했던 한일 간 안보협력관계와 무역불균형 해소라는 지향과 북일관계의 견제라는 대일정책의 기본목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본 또한 한일 간 우호적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북한과의 사회, 문화, 경제적 교류의 점진적 확대라는 종래의 대한반도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다만, 안보 대 민주화라는 대립구도, 즉 북한위협론과 김대중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공방과정에서, 일본은 소시기마다 한일 경협을 연계시키는 문제에서 비일관성을 보인 반면, 한국은 시종 한국의 안정과 일본의 안보를 결부시키는 논리의 한일 경협론을 주장했었다.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일본이 한국에 비해 국내적 요인의 영향에 민감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여기서 1980년 전반에 걸쳐 한국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으로서 양국간 대립은 봉합되는 과정이, 이듬해부터 한국이 안보경협 구상을 본격화시키는 중요한 잠재적 요소로서 작용했다는 잠정적인 결론도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결

55) 아주국, 중장기 대일외교대책, 1980.12.18

론을 잠정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본문에서 논의한 1980년대 말 후쿠다 방한이후의 구체적 전개 상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⁵⁶⁾.

1983년 안보경협 타결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 전두환 정권의 구상과 요구를 나카소네 내각이 수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스즈키 수상과 구분되는 나카소네 수상의 리더십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1980년대에 그 맹아가 보였던 한일 간의 대립 속에서 안보협력의 연속이라는 측면을 들 수 있다. 당시부터 한일 간에 안보가 우세한 국면이 조성되었고, 여기에 미국의 레이건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신냉전이라는 상황적 조건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탈 냉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한반도 위기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움직임이라는 패턴이, 1980년에 일본이 안보협력에 나서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편, 안보협력 타결이후, 한일 간의 경제관계는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경합구조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이 처럼 한국이 일본으로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1980년의 구상 속에서 확인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1980년대 중반에서 탈냉전으로 이어지는 한일관계의 구조변화 움직임이, 대외적인 압력만이 아닌 주체적인 노력의 결과였다는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별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56) 보다 구체적으로 1980년 11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일 간 안보경협 타결의 실질적인 증재자였던 세지마 류조와 전두환 대통령간의 비 공식 접촉과 관련한 에 대한 자료들이 금번의 문서공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